

월/요/광/장

박석두



1970년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889만 명으로 전국 인구 3천147만 명의 28.3%였다. 2006년에 수도권 인구는 2천413만 명으로 전국 인구 4천962만 명의 48.6%를 차지하였다. 같은 해 전국 예금액 592조 7천210억 원의 68.7%, 대출액 699조 4천300억 원의 67.1%를 수도권에서 보유하고 있었다. 제조업 사업체 11만 7천 개 중 57.2%, 서비스 사업체 76만 개 중 48.1%가 수도권에 자리잡고 있다. 사람과 돈과 사업체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 만큼 지방에 적다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국가의 정책 개입이 없다면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10개의 혁신도시, 6개의 기업도시 등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에 걸친 72.91km의 면적에 인구 50만 명의 규모로서, 2007년 7월 중심행정타운과 주거지 건설에 착공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정부기관 이전이

이루어지며 2011년부터 주민 입주자 시작될 예정이다.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있는 행정부 이외 공공기관 350개 중 157개(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 기관을 포함하면 175개) 기

지역균형에서 도농균형으로의 전환

관을 지방 시·도에 분산 이전하여 건설되는 혁신도시로서, 2007년 1월 혁신도시특별법이 제정되고 4월에 10개 지역의 혁신도시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도 이전 대상 기관에 토지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답보상태이다. 기업도시는 2005년 6월 전경련이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건교부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되어 2005년 8월 시범도시 6곳이 선정됨으로써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기업도시 시범지역 대부분이 사업 중단 상태이다. 요컨대, 수도권에 몰려 있는 행

정기관·공공기관·기업 등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정책인데, 전국에 걸친 신도시 개발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MB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수도권·충청권·호남권·대경권·동남권 등 5대 광역경제권과 강원권·제주권 등 2대 특별광역경제권을 합한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개발하며, 여기에 초광역개발과 기초생활권 개발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으로서 먼저 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지·관광벨트, 서해안은 물류·비즈니스·신산업벨트, 남해안은 해양·관광·물류경제벨트, 비무장지대 인근지역은 남북교류 집결벨트로 잠정하고 내륙특화벨트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기초생활권 개발은 163개 시군을 도시형·도농연계형·농산어촌형 등으로 유형화해 개발하는 것으로서, 전국 인구의 54%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대도시권 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개발 측면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실정을 반영한 특성화 개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개발을 주창함으로써 대도시·대규모 개발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은 대체로 수도권 이 아닌 지방의 도 단위, 광역은 그 이상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이란 개념은 지역균형발전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지역개발을 통해 신도시가 생기거나 기존 도시지역이 확장될 뿐 농촌개발·농촌발전과 무관하거나 오히려 농업·농촌의 인력과 자본 등을 흡수하여 공동화시킬 우려도 있다. 지역균형에서 도농균형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이와 함께 광역경제권별 선도산업으로서 수도권에 지식정보산업, 충청권에 의약바이오·New IT, 동남권에 수송기계·융합부품소재, 대경권에 IT융복합·그린에너지, 강원권에 의료융합·의료관광, 제주권에 물산업·관광레저 등을 선정하고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광(光)소재 등을 제시하였으나 추후 선정하기로 하였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칼럼

김종복



필자는 현재 광주지방법원을 홍보하고 선고판 결정 등을 법원 바깥에 설명하는 공보관 업무를 겸하고 있다. 공보관 업무를 시작하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판결의 취지를 설명하는 인터넷 장면이 TV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 적이 있다. 방송이 나간 순간부터 TV에서 필자를 보았다는 전화와 휴대 문자 메시지가 쇄도했다. 그런데, 전화를 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왜 그리 사투리가 심해졌냐"는 힐책이었다. 필자의 고향은 광주지만 15년이 넘게 서울에서 생활하다가 광주로 근무지를 옮긴지 3년이 되었다. 광주에 내려와서 처음 재판을 진행할 때는 법정의 엄숙

고민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수년 전부터 민사 재판에서는 '구술심리강화', 형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강화'를 사법부 전체의 표어로 삼고, 어떻게 하면 법정에서 판사와 당사자가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해오고 있다. 광주지법에서는 판사들이 '법정언행 연구회'를 만들어 당사자들과 법정에서 대화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을 정도이고, 법관연수 프로그램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듣고 그에 관한 세미나를 하는 것이 빠지지 않는다.

말이 통해야 믿음이 가지

함 등을 고려해서 나를 표준말을 사용하려고 상당노 노력을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재판에 출석한 당사자가 긴장하거나 말문을 못 잇는 것 같으면, 마구 사투리를 섞어가며 대화를 풀어간다. 판사들은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당사자들과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아주 많은 고민을 하고 그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 법정에서 당사자들이 한 말은, 판사들이 재판할 때 있어서는 제일 우선시 하는 중요한 재판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판사들이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신뢰받는 재판'을 하기 위해서이다. 재판 결과에 대해 불신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담당 판사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거나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자신이 패소하였다고 말하곤 한다. 현장에서 재판을 하는 필자로서도 항상 반성하고

판사들은 정기적으로 자신이 진행한 재판을 촬영한 다음 모니터링을 하면서 당사자들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다른 판사들이 진행하는 재판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며 서로 문 제점을 지적해 주기도 한다. 이러한 모든 노력이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서다. 적어도 당사자들이 '할말을 다 못해서 패소했다', '내 말을 판사가 잘못 이해해서 패소했다'는 국민들의 불만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법정에서 사투리를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긴장해서 말문이 막혀 있다면 다소 억살스러운 사투리를 써서라도 대화의 물고를 터 보고자 하는 것이 필자가 법정에서 사투리를 쓰게 된 이유이고, 그러다 보니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것 같다. 표준말이든 사투리든 간에 어찌됐든 '서로' 하고 싶은 말은 속 시원히 하라고, 말이 좀 통해야 그나마 '서로' 믿어 줄 수 있지 않을까. <광주지방법원 판사>

약, 맨손조제 위생상 문제 없다

얼마전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후 약국에 가서 조제를 했다. 처방전을 준 뒤 소파에 앉아 기다리다가 무심코 조제하는 쪽을 봤더니 맨손으로 약을 만지고 있었다. 마음 같으면 당장 일어나 돼 비위생적으로 약을 맨손조제 해나가고 짜고 싶었는데 어린 자식이 먹음 약을 조제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기도 부담스러워 그냥 참고 말았다. 약사가 약을 맨손으로 조제하는 비위생적인 문제는 환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이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문제

점으로 지적돼 왔으나 왜 고쳐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된다. 누구보다도 위생에 관해 철저해야 하는 사람들이 의사와 약사 아닌가? 그러나 한두 명이 근무하는 약국들의 대부분은 약사가 돈도 받고 거스름돈도 내주는데 그 손으로 약까지 조제하니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아울러 한가지 추가하자면, 앞으로 개업하는 약국은 물론, 현재 영업중인 약국들도 조제공간은 일반 시민들이 언제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픈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인순·광주시 북구 화일동

기고

홍진석



5·18영화 '순지'의 시사회장을 찾으며 이전 5·18 영화를 떠올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특별히 생각나는 영화는 '꽃잎'(1996)과 '화려한 휴가'(2007)였다. '꽃잎'이 상징적인 인물인 소녀(이정현)와 인부 장씨(문성근)를 내세워 '끝나지 않은 5·18의 상처'를 표현했다면, '화려한 휴가'는 '80년 5월, 그 때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두 영화가 보여주듯이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에서 '상징'과 '사실적 묘사'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영화 '순지'가 택한 길은 '상징'이었다. 영화는 관객에게 '이 장면, 이 인물

고 짜꾸의 자살로 영화는 끝을 맺는다. 80년 당시 시민군을 연상케 하는 짜꾸의 '착각'을 통해 감독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을까. 여러동절하다. 짜꾸의 자살은 또 무엇인가? 80년 시민군의 봉기가 자살로 끝나야 할 필연성을 가진 고 있던 얘기인가? 영화 초반에 수없이 뿌려 놓 상징과 갈등들은 어떻게 해결됐는가? 어쨌든 개어든 남녀관계나, 동창의 머리에 발상을 얹으며 만들어 놓 '순지'의 억척스러움은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영화는 후반으로 갈수록 뒤죽박죽이 되어갔다. 영화를 보 고난 이후 '광주시민들이 여전히 80년 당시의 현재를 혼동하면서, 집착하고

5·18영화 '순지'를 보고

은 어떤 상징을 담고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그 상징들은 어설프고, 종래에는 혼돈으로 끝나고 말았다. 영화 초반에는 '상징'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골에서 촌담을 팔며 생계를 이어가는 '순지'(장세운). 닭장에 갇혀 희생을 강요 당하는 촌담은, '아버지의 실종'이라는 5·18의 상처를 안고 사는 '순지'의 모습이자 독재정권에 유린당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이기도하다. 그러나 영화 초반 비교적 순탄했던 상징의 사용은 중반이후 짜꾸(김윤성)과 짜꾸가 등장하면서 심하게 위태로워졌다. 짜꾸는 '순지'를 이용해 파총을 무기 고에서 총을 훔쳐낸다. 총을 들고 5·18 기념행사가 진행 중인 '현제'의 도청 앞 광장으로 간다. 그리고 그곳에서 '과거'의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인다. 짜꾸는 기념식이 벌어지고 있는 '현제'를 80년 당시로 '착각'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리

있는 것으로 비쳐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이렇게 어수룩한 영화가 광주시와 문화관광부의 공식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 이 영화를 여러 5·18 영화 중 실재자 하나로 쉽게 치부하기 어려운 이유가 이 영화가 가지는 '공식성'에 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경이로운 민중항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5·18을 소재로 영화를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작품성 있게 만들어 다른 흥행작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18을 잘 담아내야 한다. 상징이든 사실적인 묘사든 그 어떤 방법이든 5·18을 왜곡 없이 잘 구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영화 '순지'의 감독 박광만의 말처럼 '5·18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화가 탄생될 수 있게 것이다. <광주영주경원본당 신부>

국내 인삼 경쟁력 높려면 공동브랜드 육성해야

인삼은 충남 금산이나 경상도 풍기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전라도에도 진안과 화순의 인삼은 품질과 효능에 있어서 결코 뒤지지 않는다. 인삼 종주국으로써 국내 인삼의 경쟁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청정인삼 재배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공동브랜드를 육성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공동브랜드를 바탕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생산해야 한다. 인삼뿐만 아니라 인삼가공 제품의 품질을 높여 고급화와 생산비 절감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고품질의 원료 삼을 생산하고 수삼 경제제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알려지기에

는 6년근 고려인삼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지의 현 재배방법으로는 재배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6년근 인삼을 원료 삼으로 하는 고려 홍삼은 유효성분의 함량이 매우 높아 국제적으로도 삼품의 가치나 차별화가 가능하다.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고려인삼을 대표하는 수출브랜드를 개발하고 적극 활용해야만 장기적으로 우리 인삼 산업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인삼재배 농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당국이 힘을 합쳐 하루빨리 외국산 인삼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인삼 명품 브랜드를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정애·전남 목포시 보광동

시설

조합장 선거 탈·불법 근절대책 없나

농협조합장 선거의 탈·불법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정부의 강도높은 개혁방침을 비롯하여 하도 각종 부정선거 사례들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05년 7월부터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최근 광주·전남 농협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지난 20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암군과 무안군의 농협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 예정자 등 3명을 적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영암 미암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A씨는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무안 일로농협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B씨는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올 들어 처리된 15곳 조합장 선거 중 무려 7곳에서도 불법·탈법사례가 적

발됐다. 선관위는 이 중 금품 제공 등 2건에 대해 11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5건은 수사의뢰, 2건은 경고 조치했다. 이처럼 탈·불법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조합장이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데다 조합원이 많지 않아 일부만 '포섭'하면 쉽게 당선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모범적으로 선거를 치른 농협도 적지 않다. 하지만, 선거철만 되면 난무하는 탈·불법 행위들은 연례행사가 된지 오래다. 조합장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비리로 선출된 조합장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품목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예정인 A씨는 조합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올해 전체 단위조합 159곳 가운데 5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의 주의의식이 필요하다. 농협 역시 비리행위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자율단속반 등 내부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공립고 학력향상 프로젝트 일회성 안돼야

광주일고, 광주고, 광주여고, 전남여고 등 광주지역 4대 공립고가 '명문고 부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나서 관심이다. 광주고는 지난해부터 각학년별 심화반과 이동식 수업, 특별 입시팀 구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올 입시에서 수도권 주요 대학에 30여명을 합격시키는 등 사립고를 능가하는 성적을 올렸다. 광주일고는 올해 'DREAM·FIRST·제도약'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동문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목표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광주여고와 전남여고도 명문고 부활을 다짐하고 교육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하고 학력향상에 올인 하고 있다. 특히 전남여고는 올 입시에서 4년제 대학 전원 합격이라는 기록을 달성하기도 했다. 이들 4대 공립고는 고교 평준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만 해도 '실력 광주'의 대명사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명문고였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 학생들의 학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피학교로 전락했다. 결국 공립고의 학력저하는 사립고와의 학력 격차를 불러왔고 이는 지역 공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가뜩이나 공립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이들 학교의 발상의 전환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공립고의 학력 향상이 이뤄져야 공립·사립학교 간 학력 경쟁이 촉발돼 전체적인 지역 교육수준이 신장될 수 있다. 학교교육의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학교 학력향상에 열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립고의 명문고 부활 프로젝트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자체, 지도 주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명문고였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 학생들

의 학력이 형편없이 떨어져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기피학교로 전락했다. 결국 공립고의 학력저하는 사립고와의 학력 격차를 불러왔고 이는 지역 공교육을 부실하게 하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가뜩이나 공립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공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나온 이들 학교의 발상의 전환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공립고의 학력 향상이 이뤄져야 공립·사립학교 간 학력 경쟁이 촉발돼 전체적인 지역 교육수준이 신장될 수 있다. 학교교육의 경쟁력은 지역 경쟁력과 직결된다.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학교 학력향상에 열중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공립고의 명문고 부활 프로젝트는 일회성 이벤트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학교와 교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다. 지자체, 지도 주자로 전국적인 명성을 떨쳤던 명문고였다. 하지만, 평준화 이후 학생들

無等鼓

암스테르담은 유럽의 도시 가운데 가장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는, 자유분방함이 넘쳐나는 곳이다. 거리는 전차 레일과 자동차 도로, 자전거 도로가 나란히 뻗어 열릴 보면 어지러운 정도다. 하지만 그 속엔 정연한 질서가 있다. 대표적인 '자전거 천국'으로 꼽히는 이유다. 중앙역 부근을 비롯한 도심에서 자전거는 전차·버스와 더불어 어엿한 도로의 주인공이다. 자동차가 되려 이방인이다. 자동차는 자전거에 습관처럼 양보한다. 광주를 비롯한 국내 도시들은 대부분 자전거 도로를 보드에 만들고 보행자 신호등이 자전거를 통제한다. 하지만 암스테르담에선 차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전용 신호등도 따로 둔다. 특히 자전거 도로는 전차·자동차·보행자도로와 명확히 분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자전거 도로



스에 치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2007년 7월 이후 광주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4명이 죽고 320명이 다쳤다. 입으로만 자전거 이용을 외칠 게 아니라 사고가 나면 대부분 자전거 잘못이다. 도로교통법상 차가 사람을 다치게 했기 때문이다.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